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09호
2021. 6. 7

정책동향

-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 '53조원'
- 노후 기반시설, 새로운 민간투자 방안 모색 필요

산업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 2020년 건설업 경영 분석

건설논단

- 건설(建設)다운 산업(産業)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 '53조원'

- 경제성장률 2.5% 달성 위한 투자 확대 필요, 예상 투자 규모보다 1.7조 작아 -

■ 경제 성장 불확실성 증대

- 국내경제를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민간소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득 여건 부진, 코로나19 감염 우려 지속 등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됨.¹⁾
 - 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회복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부문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산 증가가 노동 수요로 잘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²⁾
-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초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으로 경제 예측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초 일당 200~300명대를 보였으나, 최근 500~600명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2021.5.6)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

■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2022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3조원'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함.
 -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SOC 스톡 수준 및 GDP 대비 투자 비율을 도출함.³⁾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해 바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2.

2) LG경제연구원,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2021.4.15.

3)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출은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를 참조.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한국은행(2021.2)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1년 3.0%, 2021년 2.5%로 전망한 바 있음. 이에 따른 GDP 대비 적정 SOC 투자비율은 2021년 2.80%, 2022년 2.52% 수준으로 분석됨.
- 2021년과 2022년 분석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은 56.2조원, 2022년은 52.6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함.
 - 경제성장률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021년 7.0조원, 2022년은 1.7조원이 부족함.
- SOC 투자의 2022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0.9조원 수준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2.6조원으로 지출 규모 대비 1.7조원이 부족한 수준임.

■ 2022년 SOC 투자 확대 필요

- SOC 투자는 국내외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영국 재무부(2021.3)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16.11)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일 2.2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함.
 - 영국은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 균형 발전, 녹색 산업 혁명,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 2022년 SOC 예산은 27.8조원으로 실질가격 기준으로 전환시 금융위기 직후보다 작으며, 경제성장률 2.5%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으로도 부족함.
-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시설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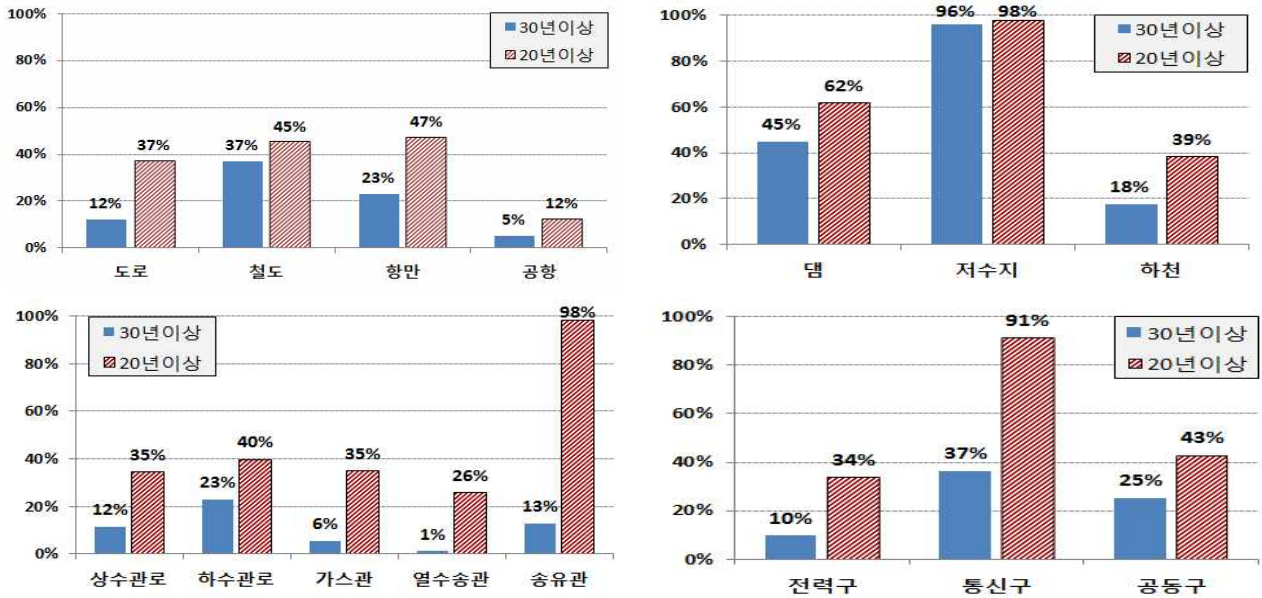
노후 기반시설, 새로운 민간투자 방안 모색 필요

- 민간 투자플랫폼 구축과 대안적 공공재원 활용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필요 -

과거 고도 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 지난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핵심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국민 생활편의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하구와 지하관로, 댐·저수지 등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비율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정부 발표자료 p.4에서 인용.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적기 재투자가 필요

- 해외 선진국 사례⁴⁾에 비춰볼 때, 기반시설 노후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수준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커다란 미래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⁵⁾
 - 가령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반 건설된 시설물들을 방치한 결과, 재투자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타 부문으로의 재정지출 확대가 제약되는 어려움에 직면함.⁶⁾

4) 가령 토머스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 「미국 쇠망론」을 통해 미국의 부실한 인프라가 미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인임을 주장한 바 있음.

5) 이승우 외(2019),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과 정책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용 참조.

■ 노후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여력은 약화

- 지난 4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코로나 팬데믹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 여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고용 위축과 소외 계층의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 확대로 방어하면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는 역대 최대 수준은 118.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⁷⁾
- 지자체 예산 역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함.

■ 시중 민간 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투자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의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체계는 정부 재정 중심이며, 법상 활용 가능한 민간투자 방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존재함.
 - 민간투자사업(「민투법」), 신탁개발(「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민간참여개발(「민투법」)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노후시설 투자 및 운용과 관련된 규정 미비, 민간 참여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대상 시설물의 비수익성으로 인한 민간의 투자 유인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민간 참여가 곤란함.

■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체계 마련이 필요

-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참여 유도를 위해 ①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 발굴’과 ‘발굴된 신규사업과 노후시설사업의 bundling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상’이 가능한 ‘투자플랫폼’ 구축, ② 민간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저감시켜줄 수 있는 공공재원의 투입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재투자가 시급한 노후기반시설의 상당수는 그 자체로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때문에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담보되는 신규·노후시설물 사업과 비수익성 시설물 사업을 적절히 bundling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수의 노후시설물에 대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성 사업이 원활히 발굴되고, 이들 사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무수익 시설물 사업과 매칭되어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즉 ‘투자플랫폼’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정부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자금조달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지 않은 새로운 공공재원을 활용해 민간투자의 수익률과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함.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6) 김진수(2018), 「국가 주요 시설물 노후화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의 내용 참고.

7)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재정」, 정기발간물 p.82의 내용을 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 조직, 프로세스, 인력 등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 운영 전략 필요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 투자 증가

- COVID-19의 위기는 전 세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역시 시장, 상품, 생산시스템이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섬에 따라 혁신 기술과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맥킨지의 2020년 12월의 설문조사⁸⁾에서 북미 및 유럽 기업의 경영진 중 51%는 2020년에 신기술(원격근무 기술 제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응답했으며, 75%는 2020~2024년 사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함.
 - 건설기업 경영진의 53%도 COVID-19 위기 이후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투자를 늘렸다고 답변함.⁹⁾
-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44조 8,000억원의 국비를 디지털 뉴딜 분야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러한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2021년 국가 R&D의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 기술 분야에서 전년 대비 14.3% 증가한 6,03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건설산업의 전면에 첨단기술이 등장하고 있음.

■ 건설기업의 기술 투자 현안

- 건설산업에서는 BIM,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로봇, 3D프린팅,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영 컨설팅기관들은 혁신 기술과 디지털화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다만, 기술개발 및 디지털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낮은 건설산업 특성상 기업의 투자 여력은 부족한 상황임.

8) McKinsey Global Institute(2021. 2),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9)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6).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 How disruption is reshaping the world's largest ecosystem」.

- 맥킨지의 디지털화 지수 조사¹⁰⁾에서 건설산업은 가장 낮은 수준의 디지털화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건설기업의 낮은 수익과 이에 비롯된 저조한 투자가 지목됨.
-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설문조사¹¹⁾에서는 건설 부문의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원인으로 높은 재정 지출(62.4%), 과도한 시간 소요(61.5%) 등이 응답이 확인됐음.
- 건설산업에서 혁신 기술은 아직 지엽적인 업무에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음. 건설기업 대부분은 각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기술을 선정하고 효율적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 특히, 현시점에서 기술 혁신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인력 등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 운영 전략이 필요함.

■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건설기업의 준비 방향

- 건설기업은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에 대한 고심에 앞서 혁신 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기업 비즈니스와 운영의 특성, 보유 역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 전환은 축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수많은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 프로세스의 이해와 조정이 필요함.
- 따라서, 건설기업은 본격적인 기술투자에 앞서 기업의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전략과 함께 <그림 1>과 같은 기업 운영의 핵심 성공 요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¹²⁾
- 경영컨설팅사인 올리버와이만은 디지털화는 단순히 혁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방식이 진화하지 않으면 디지털화가 가져올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함.

<그림 1>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건설기업 운영의 발전 방향

 Organization	 Processes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장벽을 극복하고 디지털 리더십 발휘 ▪ 외부 파트너와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프로세스의 핵심에 고객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스마트 교육, 효율적 지식관리를 위한 적응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집중 ▪ 최적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데이터 우선순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툴(tool)과 분석가능 데이터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기능, 미래 준비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경력 트랙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과 투자 속도 향상 ▪ 더 많은 위험의 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측정 지표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발전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 Oliver Wyman(2018), p.13.

성유경(연구위원 · sungky@cerik.re.kr)

10)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 2). Reinventing construction : A route to higher productivity.

11) ZEW(2019. 10), Beitrag der Digitalisierung zur Produktivität in der Baubranche, BBSR(Federal Institute for Building, Urban and Spatial Research).

12) Oliver Wyman(2018), Digit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revolution is underway.

2020년 건설업 경영 분석

- 2019년에 이어 건설업 매출액 감소 지속, 수익성은 소폭 개선 -

■ 건설업 매출액, 3년 연속 내림세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20년 건설업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40%로 건설업 매출액이 2018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표 1〉 참조).
 - 건설업 매출액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1.20%, 2019년 -2.96%, 2020년 -2.40%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치를 보임.
 - 전(全) 산업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0.96%)보다 2020년(-3.16%)에 더 큰 하락 폭을 나타냄.
 - 건설업 성장성 지표 중 총자산증가율(전년 대비)은 2020년 6.79%로 2019년 6.10%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20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건설업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19년 5.52%에서 2020년 6.37%로 0.85%p 상승함.
 -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9년 5.77%에서 2020년 6.09%로 0.32%p 상승함.
 - 2020년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100]은 587.90%로 2019년 531.77%보다 56.13%p 상승함.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전(全) 산업에서 이자보상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
-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건설업 매출액 하락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은 건설기업이 2020년에 사업의 확장보다는 내실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됨.
-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함.
 - 2020년 건설업 총자산회전율은 0.88%로 2019년 0.93%에 비해 0.05%p 하락함.

2020년에도 건설업 재무구조 개선 지속

- 2020년 건설업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됨.
 - 2020년 건설업 자기자본비율은 44.13%로 2019년 43.29%보다 0.84%p 상승함.
 - 2020년 건설업 부채비율은 2019년 130.98%에서 2020년 126.58%로 4.40%p 하락함.
-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차입금의존도는 다소 증가함.
 - 2020년 건설업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25.19%에서 0.68%p 상승한 25.87%임.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2020년 건설업 차입금평균이자율은 3.55%로 2019년 4.27%에 비해 0.72%p 낮아짐.

2021년, 경기 회복 기대감 있지만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상황

-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있는 상황이나 원자재값 폭등, 지속적 인력난,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건설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요인들 또한 존재함.
-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이 무리한 성장보다는 내실 확보를 위한 노력과 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수익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지속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 2020년 주요 경영지표

구분	연도	성장성 (%)		수익성 (%)			활동성 (회)	안정성 (%)		
		총자산 증가율 ¹⁾	매출액 증가율 ²⁾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건설업	2019	6.10	-2.96	5.52	5.77	531.77	0.93	43.29	130.98	25.19
	2020	6.79	-2.40	6.37	6.09	587.90	0.88	44.13	126.58	25.87
제조업	2019	3.16	-2.27	4.44	4.74	574.74	0.83	61.06	63.78	20.38
	2020	4.82	-3.62	4.41	4.87	616.41	0.78	60.42	65.52	20.73
전산업	2019	4.98	-0.96	4.08	4.80	367.46	0.78	50.62	97.56	28.27
	2020	4.92	-3.16	4.32	5.06	391.49	0.73	50.65	97.45	28.16

주 : 1) 전년 말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021.06.03), 2020년 기업경영분석(속보).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건설(建設)다운 산업(産業)

유대인의 지혜서 미드라쉬에서는 뒷담화는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그리고 듣는 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런데도 뒷담화를 안 해 본 사람이 있을까. 한 번쯤은 저 사람은 어떻다며 없는 곳에서 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뒷담화는 모두가 하는 것이니, 해도 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험담을 뒤에서 하지 않고 얼굴 앞에서 한다면 어떨까. 시도 때도 없이 욕먹는 건설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건설산업은 부인하기 어려운 ‘불안전’ 산업이다. 숫자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2019년 기준 전체 산업별 재해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9%로 25.18%의 제조업보다도 높으며, 2019년 한해 건설업의 사고사망자는 428명에 이른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숫자다. 이렇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시행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 대표적인 불량 사례로 건설업은 항상 거론된다. 험담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징역과 10억 원 이하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내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여타 안전 관련 법률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런 업계의 목소리가 제시 가능한 의견이 아니라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적 뒤에는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노라고 약속을

거듭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은 과거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다수의 기업이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도 있었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업계의 계속된 결심과 정부의 사면이 있었음에도 담합이 적발되니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주장 많았다.

하지만 담합이 발생하는 데는 1공구 1사 원칙 등과 같은 비효율적인 형태나 가격 중심의 발주 방식 등도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즉, 산업이라는 유무형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책임은 기업에만 있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만 잘못된 게 아니니 좀 봐달라는 책임회피의 자세가 아니라 산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욕을 먹기에 딱 좋은 생산 환경을 가진 건설 산업이다. 그래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좀 나아지는 게 티가 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바뀌었구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달라진 건설산업이 되기까지 지금과 같은 험담과 지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만 가지고 그런다고 볼멘소리는 하지 말자.

국가 경제 성장 축의 하나로, 국가의 인프라 건설과 유지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국민의 안전한 환경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는 건설산업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자. 하지만, 잘못된 지적과 험담에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자. 그래야 ‘건설’다운 ‘산업’이다. <아주경제, 2021.5.27>